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5년형 추진

중기부,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

(최고)

허위서류·과장광고 부당개입 규정 최대 5000만원 벌금 부과 법제화 올해 신고 482건 중 8건 수사의뢰 동일 IP 차단·AI 신청체계도 운영 신고자보호·조사권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당개입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금지·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어 위중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번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총 4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1건의 '보험 끼워팔기'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신청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행위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거짓 작성·제출 행위를 하도록 교사·알선하는 행위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조력 제공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개입'이라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면책	적극적·중대가담자의 경우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			
포상	포상기준 완화 및 포상 규모 한시적 확대 적용 (예) 신고소액포상금 40만원 → 60만원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광고물 신고 캠페인 홍보카드 제작·배포 우수사례 전파·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사전교육 홍보카드 제작 및 배포 지역협단체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뉴스레터 등 홍보 유관기관 협업(포스터) 인식제고 캠페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영상 제작 및 SNS 영상 송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허성무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9일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당개입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거나 최대 5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기부가 부당개입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 현의자 등에게 출석,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결과 부당개입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아울러 부당개입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신청·심사체계도 개편했다. ▲'대리신청' 방지를 위한 동일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여러 기업 신청

탐지 차단 ▲AI 기반의 브로커가 필요 없는 지원 신청체계 운영 ▲정책자금 평가위원 선정시 풀(pool)에서 난수 추첨 등 평가위원 운영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상반기에 각 기관에서 운영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482건 중 85.5%인 412건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기관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었다. 여기에는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27건도 포함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김포~제주 슬롯 재배분에도 운항 감소

정부, 운항 준수율 서비스평가 검토 운수권 배분 불이익 등 간접관리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과정에서 재배분된 김포~제주 노선 슬롯 일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국토교통부가 슬롯 미활용만으로 항공사를 직접 제재하거나 슬롯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운수권 평가 반영과 대체항공사의 무이행 여부 등을 통해 간접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항공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정기편은 323편 감소했지만 슬롯을 넘겨받은 제주항공·트리니티항공·이스타항공·피라타항공의 증편 규모는 186편에 그쳤다. 한국항공공사 통계상 지난 4~5월 전년 동기 대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보다 366편을 추가 운항할 수 있었지만 실제 증편은 180편에 머물렀고, 트리니티항공은 61

편 추가 운항이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60편을 감편했다. 양사에서만 약 2만1000석 규모 공급이 줄어든 셈이다.

소비자 불편과 이동권 침해 논란에도 국토부가 이를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다. 슬롯은 국제 기준인 '80% 사용 규칙'에 따라 운영돼 80% 이상 사용 시 다음 시즌 우선 배정권을 받는다. 활용률이 낮아도 즉시 회수되지는 않으며, 허위 자료 제출 등 법령 위반이 없는 한 강제 회수 근거도 없다. 유럽공항공회(ACTE EUROPE) 등은 슬롯을 운항 의무가 따르는 제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계획 이행률을 활용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대비 실제 운항 준수율을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시을)도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혜은 기자

최윤범, 호주 총리와 핵심광물 협력 논의

(고려아연 회장)

호주 제련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시너지 기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예방하고 호주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제련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또 핵심광물 밸류체인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과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24일 호주 수도 캔버라의 총리 집무실에서 만남을 갖고 핵심광물 밸류체인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최 회장이 고려아연 계열사인 호주 타운스빌 소재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 재임 당시 성과를 거둔하며 "고려아연은 호주 내에서 운영 역량이 검증된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호주 산업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호주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며 "고려아연 역시 호주 정부의 자원·에너지 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평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이 24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려아연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제련소 운영뿐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그린수소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고려아연은 지난 30년 동안 호주에서 제련업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호주 현지의 산업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투자해 온 파트너"라며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고려아연의 기술력 및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는 향후에도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성운 기자 ysw@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의 VCV 타워 착공식에서 (왼쪽부터) 김기수 LS전선 북미지역본부장, 릭 웨스트(Rick West) 체서피크 시장, 캐리 체너리(Carrie Chenery) 버지니아주 통상상무부 장관, 구분규 LS전선 사장, 아비게일 스펠버거(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 팀 케인(Tim Kaine) 미국 연방 상원의원, 바비 스콧(Bobby Scott) 미국 연방 하원의원, 심윤찬 LS그린링크 매니저 디렉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美 최대 해저케이블 기지 구축 속도

버지니아 공장 VCV 타워 착공 높이 201m로 세계 최대 규모 내년 하반기 공장 준공 목표

LS전선이 미국 현지 해저케이블 생산 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며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 체계를 앞세워 미국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LS전선은 미국 생산법인 LS그린링크가 최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조성 중인 해저케이블 생산공장에서 VCV 타워 착공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LS그린링크 공장은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생산기지로 조성되며, 내년 하반기 준공과 오는 2028년 1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VCV 타워는 초고압 해저케이블의 절연층을 형성하는 핵심 생산설비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중력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해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VCV 타워는 높이 201m 규모로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VCV 설비이자 버지니아주 최고 높이 구조물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대규모 해저케이블 생산 시설은 1곳에 불과해 LS그린링크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최대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재편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 기반의 중

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LS전선은 북미 전력 밸류체인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S그린링크와 LS마린솔루션이 초고압 송전망 시장을 담당하고, 가운데전선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을 맡는 구조다.

구분규 LS전선 대표는 "LS그린링크는 북미는 물론 유럽 시장까지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현지 생산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비게일 스펠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의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기보·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 사업화 맞손

환경R&D 기업에 기술평가·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손잡고 녹색기술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시장 진출을 돕는다.

기보는 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지난 2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환경 R&D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전문성과 KEITI의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역량을 연계해 환경기술 분야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 녹색기술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KEITI는 환경기술 R&D

과제로 개발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환경기술 R&D 수요 기업 발굴 ▲R&D 과제 및 성과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기술 R&D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핵심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